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1. 9. 1.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진철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1611
- 나. 발 의 자: 남연희 의원, 김현주 의원(찬성의원 8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7월 23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 다.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5조)
- 라.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점검·지원 (안 제6조)
- 마. 불법촬영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체계의 마련 (안 제7조)
- 바. 점검인력의 확보·운영 및 교육 등 (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나.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다.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및 전 부서

라.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설치주체의 의미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목적이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시설 내 화장실(예: 영화관)이라도 불특정다수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면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현재 성동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총90개소로 아래와 같음.

〈성동구 내 “공중화장실 등” 현황〉

(단위: 개소)

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90	49	41	-

- “다중이용장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sup>1)</sup>를 참고하여 조례안에 도입한 개념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불응 시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불법 촬영이 빈번한 장소 중 하나인 바, 본 조례가 규율하려는 대상을 잘 설명하고 있음.

##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4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민간시설일 경우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성적목적에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5조)**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점검토록 규정하여 사전 예방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안 제6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화장실의 점검 방안을 마련은 하였으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 것은 민간시설인 만큼 구에서 상시 점검이 어려워 부득이 점검이나 장비대여 등의 지원에 한정함

- **신고체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안 제7조 ~ 안 제9조)**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장소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점검을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홍보물 제작·보급 (안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 표시와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 및 신고체계 등을 마련하되,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등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점검사업으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시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만에 5.8배가 증가하였으며, 처벌은 벌금형이 56.5%, 집행유예 30.3%, 징역형 8.2%로 나와 있습니다.
  - 발생원인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관대한 야동문화 및 피해자를 향한 왜곡된 시선 등 다양한 사유가 꼽혔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교육, 가해자처벌 관련법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명칭을 포함하여(다중 이용시설,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등)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4개의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sup>2)</sup>
-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될 수 있는 바,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법촬영”으로 검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바,

○ 본 조례안을 통해 불법촬영기기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